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 영 춘*

- | | |
|---------------------------|---------------------|
| I. 서론 | IV. 일본의 군사력 강화 |
| II.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인식 | V.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
| III. 일·중관계의 협력과 쟁점 | VI. 정책대안 |

Abstract

The Rise of China, Japan's Threat Perception and Military Buildup

This study examines recent developments Chinese-Japanese rela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security of the East Asia. In the first section, the author discusses the growing political and security role of China and Japan in East Asia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In the second section of this article, the author illustrates major areas of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These areas include the incorrect interpretation of history, visits to the Yashikuni Shrine by some Japanese politicians and the disputes over the Diaoyutai/ Shenkaku Islands.

Other issues presented include the discussion on suspicions about each other's military buildup and China's concerns about the US-Japanese mutual security treaty, a

present source of conflict in Chinese-Japanese relations. Japan began restructuring, its defense strategy and new threat from China and North Korea.

This gave momentum to change Japanese defense policy toward regionaliz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Bush administration's stance to strengthen US-Japan alliance combined with the rise of regional and non-conventional threat enabled Japan to take an active defense policy orientation.

Key Word: the rise of China, threat perception shenkaku islands, economic cooperation, military buildup, US-Japan alliance, Korean peninsula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1972년 이후 소련에 대한 견제를 공동인식으로 하는 미·중·일 관계는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으로 나타났다. 중·일 관계는 1970년대가 밀월관계라면 1980년대는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면서도 과거사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1985년 나카소네 수상은 일본의 역대총리로는 처음으로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참배 함으로써 중국정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군비증강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경계론이 부상하였다. 일본은 냉전 종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두 자리 수로 군비를 증액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¹⁾ 1995년 중국은 일본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5.18, 8.17)하고, 황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10.16)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무상원조 동결조치를 취하였다.²⁾ 1996년 초에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측 활동에 대해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998년 일·중 관계는 과거사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갈등이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적용범위에 대만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중국측의 반발이 지속되었고, 아울러 언제라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경제부문에서는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 일본의 지도자들은 경제적 원조와 무역, 투자 등을 통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보다 온건하고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취하도록 유도해 왔다. 그러나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최근 일본경제의 침체는 일본 지도자들로 하여금 중·일 양국의 균형을 고려하게 하였다.

1) 일본은 1993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군현대화를 진행하면서 남사군도(南沙群島), 서사군도(西沙群島)를 거점으로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Hideo Sato, "Japan's China Perceptions and its Policies in the Alliance with the U.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arch 18~21.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새로운 안보위협 국가로 인식하였다.

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9, 30, 1997.

최근 중국의 군사력 근대화정책은 비록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병력의 장거리 파병을 지향하고 있어서,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주변국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미·일 동맹 강화와 신가이드라인, TMD공동개발과 함께 일본의 군사력증강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하여 중국에게 위협으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최근 중국의 정치·안보 역할 확대와 군사력 증강에 따른 일본의 안보인식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중·일관계의 마찰요인을 분석하고, 셋째로는 이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 강화정책을 검토·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정책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하기로 한다.

II.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인식

냉전체제의 소멸은 동북아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복잡한 구도로 표출되고 있다. 일본은 탈냉전과 그에 따른 세계적 규모의 극적인 안보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영토문제, 민족문제, 분단문제, 민주화 및 체제문제 그리고 과거사 문제 등이 미해결로 남아있어 지역안보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일본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안보의 이중적 성격은 중·일 상호간에게 잠재적 안보위협을 인식시켰으며 군사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중국은 1989년의 천안문 사태를 통해 체제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역 분쟁의 가능성은 한층 증대되었으므로 국지적 도전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할뿐 아니라, 새로운 체제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익의 보호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천안문 사태를 통해 입지를 굳힌 중국의 군부는 걸프전을 겪으면서 첨단과학 기술에 기초한 중국군의 근대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 때 이후 중국의 군사비는 두 자리 수 증가를 지속해 오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는 '6·4 천안문사건'이 일어난 1989년의 인민폐 251억여 위엔이었는데,

이는 1988년에 비해 15.35% 증가된 것이었다. 1992년에는 1991년에 비해 14.40%, 1993년은 1992년에 비해 12.69%이었고, 1994년은 29.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³⁾

최근에도 중국의 국방비는 2001년 17.7%, 2002년 17.6%, 2003년 9.6%, 2004년 1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⁴⁾ 이러한 국방비의 증가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이미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⁵⁾

중국은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하여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의 도서지역과 다오위다오(釣魚島)를 중국령으로 확정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정책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게 될 세력공백을 자신이 메우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러시아에서 수호이 27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해·공군력 현대화를 통해 원거리 투사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본은 1993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현대화를 진행하면서 남사군도, 서사군도를 거점으로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일본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핵실험을 실시(5.15, 8.17)하고, 황해 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10.16)함으로써 역내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하였으며, 일본도 군사비를 증액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치·군사 대국화를 모색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에 항의, 1995년도 대중 무상원조액을 1994년도 제공액(78억 엔)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인도적 부문을 제외한 대중 무상원조 전면 동결방침을 전달(8.30)하였다.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1997년 9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후 중·일간의 지역주도권 확보경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새 지침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유사개념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지침이 일본 단독 유사(즉 일본이 무

3) 오규열, 『국군사론』 (서울: 지영사, 2000), pp. 131-132.

4) 『중앙일보』, 2004년 3월 8일.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May 27, 1993.

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 한·미·일 협력방안)였다면 새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를 주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펼치는 중심무대가 한반도 및 대만해협 등 주변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물론 양측은 최종 합의서에 일본 주변 유사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6월 중간보고 발표 이후 ‘일본주변유사’에 대만해협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 방위관계자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반도, 대만해협 등을 주변 유사지역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바뀌었다. 자위대 주력군을 북방에서 규슈·오키나와 등 남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방위전략이다.⁶⁾

일본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대상은 북한이다. 1998년 대포동 미사일발사 실험과 괴선박 영해 침범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자위대와 일본방위청은, 이미 북한을 선제 기동타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은 2001년 5월에 2020년을 예상하여 『일본 안전보장에 관한 보고서』⁷⁾에서 동아시아 국가간에 경쟁의식이 강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내셔널리즘이 대두할 우려가 강하다면서 중국을 지적하였다. 즉 중국은 19세기 유럽에 있어서 독일 같은 존재라면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로 지목하였다.

중국은 과거 역사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수시로 과시하여 왔다. 예를 들어 1979년 등소평은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를 침공한 베트남을 응징하기 위해 교훈을 위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인민해방군(PLA)을 파견한 바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1975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Paracel섬에서 베트남을 축출하였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저지하였다.⁸⁾ 1995년 7월과 1996년 3월에 중국은 대

6) 『日本經濟新聞』, 2001년 8월 6일.

7) 위의 신문.

8) 김성철, “일중관계의 쟁점과 추이,” 『세종정책연구』 2001-9, pp. 29-30; 『중앙일보』, 2004년 3월 26일. 현재도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서 영유권분쟁을 현재도 벌이고 있으며, 양국외에 브루나이, 필리핀, 대만 등 6개국이 석유와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은 중국의 무력사용 의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만에서 실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에 자국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

일본은 미국에서 발생한 2001년 9·11 사건을 계기로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군사력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과 한반도정세의 불확실성의 증가를 빌미로 우경화된 분위기속에서 보통국가를 외치며 헌법개정을 유도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Ⅲ. 일·중관계의 협력과 쟁점

1. 과거사 문제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중·일관계를 긴장시켜 왔다.⁹⁾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총리가 정부 각료들을 대동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일부 내각관료와 국회의원들도 참배에 동참하였다. 1996년 11월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총리가 江澤民에게 「야스쿠니신사」를 다시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한 중·일간 마찰이 일단락된 듯이 보였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2004년 3월 27일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자기 나라 전몰자를 추도하는데, 왜 외국인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직도 이상하기 그지없다”고 발언하였다.¹⁰⁾ 또한 고이즈미는 매년 한 차례씩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¹¹⁾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행위는 정교분리(政教分離)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법원(후쿠오카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¹²⁾ 이번 판결에 대

9) 東京에 위치해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1869년에 설립된 「招魂社」가 1879년 개칭된 것으로서, 1931년 일본의 중국침략이후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일본정객들이 참배를 해왔던 곳이다. 이 곳에는 2차대전 당시 대외침략을 수행하였던 1급 전범들의 영혼이 안치되어 있다.

10) 『讀賣新聞』, 2004년 3월 28일.

11) 『朝日新聞』, 2004년 3월 28일.

12) 『毎日新聞』, 2004년 4월 8일.

해 고이즈미 총리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참배가 왜 헌법위반인지 모르겠다”며 향후 계속적인 참배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치가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하는 것이다.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는 2004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¹³⁾

중국정부는 고이즈미의 잇따른 신사참배와 관련, 당분간 일본총리의 중국방문을 거절하기로 요청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¹⁴⁾

2. 영토문제

조어도(釣魚島: 중국명 다오위다오, 첨각열도, 尖閣列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와 관련한, 중·일간의 갈등은 1990년대 들어서 양국의 민족주의화와 우경화추세로 인하여 첨예화되었다. 센카쿠열도 영유권문제는 일본 오키나와가 미국의 지배 하에 있었을 당시까지만 해도 중·일 관계에 현안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1971년에는 미·일 양국이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센카쿠열도를 반환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 오키나와의 실효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1972년 9월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일본과 잠정 합의하고, 1978년 8월 『평화우호조약』 체결 당시에도 일본측에 이 문제해결을 후대에 맡기기로 제의함으로써, 다오위다오 문제로 인하여 중·일관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국은 다오위다오 문제의 분쟁을 접어두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하자고 제의해 왔으며, 중·일 외무장관은 1996년 11월 마닐라에서 회동을 갖고 다오위다오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¹⁵⁾ 중국은 다오위다오 문제가 악화될 경우 중국 국민들의 대중시위를 초래하여 내내 불안을 조성할

13) 『조선일보』, 2004년 4월 24일 보도에 의하면, 아사히신문의 최근설문조사에서 일본국민들의 70%는 그가 계속 집권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4) 『조선일보』, 2004년 2월 17일.

15) 『한국일보』, 1996년 11월 24일.

수 있으며,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 지역국에게 중국위협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고, 대만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분쟁을 덮어두고자 하였던 것이다.

중동지역으로부터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전체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 해로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다.¹⁶⁾ 남사, 서사군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주변의 군사적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은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 대한 공동개발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남사군도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센카쿠섬을 자국의 영토라는 전제하에 공동개발을 제기하고 있어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도 다오위다오섬은 중국의 영토로 해양자원에 대한 일본과의 공동개발은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일본총리의 계속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영토분쟁지역인 다오위다오에 대한 중국 활동가들의 상륙사건¹⁷⁾ 등으로 불거진 중국과 일본의 외교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외교상 관계를 깨뜨리고 일본 인사들과의 예정된 만남이나 접촉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측의 반발에 맞서 일본의 자민·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은 센카쿠열도 문제와 한국과의 독도문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의원연맹’을 발족시킬 예정¹⁸⁾이며, 센카쿠열도에 시찰단 파견을 검토 중이어서 문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 군사력 증강문제

중국의 군비증강과 중국의 핵실험 실시 등은 일본의 중국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안보

16) Lam Peng Er, “Japan and The Spratlys Disputer,” *Asian Survey*, vol. 36, no. 10 (October 1996), pp. 995-1010.

17) 『朝日新聞』, 2004년 3월 25일, 중국운동가들의 상륙은 1996년 10월 이래 8년만이다.

18) 일본중의원 안보위원회, 센카쿠열도 ‘영토보존’ 결의. 『讀賣新聞』, 2004년 3월 30일.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는 1988년까지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다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방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6·4 천안문사건'이 일어난 1989년으로 이 해 중국은 인민폐 251억여 위안을 국방비로 지출하여 전 해인 1988년에 비해 15.35%가 증가하였다. 매년 중국 국방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1990년은 1989년에 비해 15.45%, 1991년은 1990년에 비해 13.78%, 1992년은 1991년에 비해 14.40%, 1993년은 전년 대비 12.69%, 그리고 1994년은 무려 29.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¹⁹⁾ 최근 중국의 국방비는 2001년 17.7%, 2002년 17.6%, 2003년 9.6%, 2004년 1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²⁰⁾ 2003년 9.6% 증가율은 14년 만에 한 자리 수 증가율인데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위협 등 아시아패권추구라는 의심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1985년 294억 1,400만 달러였던 국방비를 1999년에는 398억 8,900만 달러로 35.6%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411억 6,700만 달러로 다시 3% 증액하였다.²¹⁾ 일본은 중국의 군비증강 목표를 자신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아·태지역에서 독자적인 패권을 추구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은 1994년에는 중국의 반대를 무릎 쓰고 히로시마 아시안 올림픽에 대만의 부통령을 초대하였다.²²⁾ 일본은 1995년과 1996년에 중국이 전 세계적인 핵실험유예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시하자 정부개발원조(ODA)를 중단하였다.

일본은 중국이 1992년 영해법 제정에 이어서, 1993년 서사군도에 설치한 임시활국로를 '수호이-27'기종 이상의 전투기와 전폭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군함정박시설을 해군기지로 개조²³⁾한데 대해서, 이러한 활주로와 군함정박시설로 서사군도에서 남사군도 및 센카쿠열도까지 작전반경이 확대되었다고 보고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1997년 6

19) 오규열, 『중국군사론』 (서울: 지영사, 2000), pp. 131-132.

20) 『중앙일보』, 2004년 3월 8일.

21)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p. 3001. 일본은 1985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방위비를 318.5억 달러로부터 403.83만 달러로 약 27% 증가시켰고, 나아가 2000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0% 가량 늘어난 444억 1,700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22) 최운도, "21세기 일·중 관계의 전망," 『일본연구논총』, 제13호 (여름호, 2001), p. 160; 일·중 관계에서 1994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응발언과 강경자세가 빈번해졌다.

23) 吳建德, 『中國威脅論』 (臺北: 五南圖書出版公司, 1996), p. 166.

월 미일방위협력지침, 2차 중간보고 안에서 미·일은 일본 유사시 주변지역의 범위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및 센카쿠열도의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중국의 군사력증강 및 확대 정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게 위협요인²⁴⁾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방위백서는 1990년 말부터 중국을 위협국가로 꼽기 시작하였다.

4. 경제협력의 전개

일·중관계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정경분리로서, 많은 갈등관계 속에서도 경제교류는 지속되어 복합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문화적 공통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상품수출시장과 투자유치대상으로서 일본을 주요한 교류대상국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 역시 중국의 생산기지 및 광활한 시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1978년 국교정상화 시 10억 달러였던 일·중간 무역액은 1979년 69억 달러로 증가하고, 2000년에는 700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은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중국도 일본의 제 2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1979년에 시작된 일본의 중국으로의 ODA는 1999년 말 누계 2조6천8백8십3억 엔에 달한다. 일년 기준 공여금은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1, 2위를 차지한다. 일본은 이 당시 대중경제협력3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중원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구선진제국과의 협조를 모색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제국들과의 균형에 주의를 기울이고, 군사협력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⁵⁾ 자민당 내에서는 대중원조가 군사비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비판론도 존재하였다.

1998년 8월 타케시타 총리의 방중 당시 일본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일·중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더하여 타케시타 총리는 1990~95년에 해당하는 제3차

24) Ming Zhang and Ronald N. Montaperto, *A Triad of Another Kind: The U.S., China and Japan* (N.Y.: St. Martin's Press).

25) 손기섭, “일본 가이후내각의 제3차 대중엔차관협력의 동결해제 결정,” 2001년 춘계학술대회(공동주최: 한국재향군인회, 한미안보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p. 3. 재인용; 第88回國會衆議院會議錄 第4号 『國務大臣の演説に對する竹入義勝君の質疑』, 昭和54年 9月 6日, p. 67.

엔 차관으로 42개 프로젝트에 대한 8,100억 엔의 지급을 약속했다. 이것은 1984년에서 1989년까지의 제2차 차관총액 4,700억 엔(16개 프로젝트 대상)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였다.²⁶⁾ 또한 당시까지의 차관대상 프로젝트가 대부분 철도나 항만 같은 인프라정비에 국한된 데에 반해, 제3차 차관은 지역발전과 농업진흥에도 비중을 두어 화학비료공장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1991년 4월에 일본은 ODA(정부개발원조) 4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①군사비지출, ②대량살상무기개발, ③무기수출, ④민주화 및 기본적 인권에 있어서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에게만 제공한다는 것이다.²⁷⁾ 일본은 1996년에는 수혜국에게 사용용도와 내역을 밝히기를 촉구함으로써 외교정책 수단으로써의 적극적 활용 의지를 내비쳤다. 1995년과 1996년의 중국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이 엔 차관의 동결을 발표한 것이 그 실례가 될 것이다.

2000년 10월에 주룽지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청하였다. 주룽지 총리의 방일 목적은 일본이 ODA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본국민의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역사문제는 뒷전에 놓이게 되었다. ODA와는 별도로 무역문제도 논의되었는데 일본과의 교역규모가 600억 달러에 달한 중국에게 있어 일본은 주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의 경제상황은 크게 호전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1993년에 이미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²⁸⁾ 2003년의 중국 GDP의 성장률은 9.1%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²⁹⁾ 일본이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는 비판론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거품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에 있어서도 일본에 커다란 적자누적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³⁰⁾

26) 김성철, “일·중 관계의 쟁점과 추이,” p. 20.

27) 鈴木宗男, 『世界が變わる日本が變わる』(東京: 講談社, 1992.), p. 83.

28) *World Economic Outlook*, May 27, 1993.

29) 『중앙일보』, 2004년 3월 30일.

30) 일본은 자국의 경기침체, 산업공동화, 무역흑자감소 등 경제난제의 근원이 중국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일·중의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자원과 연료부족, 공해 등 환경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안보 및 아시아의 무기경쟁을 초래하므로 일본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비판론의 초점은 안보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중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³¹⁾ 이것을 분석한다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건전한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들은 민주화를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민주화는 군사력 증강보다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가정이 중국의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은 비판하는 것이다.

일본의 통상백서(2001)에 의하면, 일·중간의 갈등은 기술이전문제와 수입제한조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높은 생산성과 구매력, 우수한 기술력, 산업집적 조건 등이 갖춰져 세계 2위의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했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정보 기기산업과 첨단산업분야에서 일본과 경쟁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IV. 일본의 군사력 강화

일본의 군사력강화를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1995년의 신방위대강과 1997년의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은 탈냉전과 그에 따른 세계적 규모의 안보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와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증강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은 1995년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인 역할확대를 골자로 신방위대강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기본적 방위력구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미·일 안보유지체의 유지·강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자위대 규모 축소 ㉣AWACS(조기경보기) 4대 도입 등 질적인 전략을 향상

31) Michael J. Green and Benjamin L. Self, “Japan’s Changing China Policy: From Commercial Liberalism to Reluctant Realism,” *Survival*, vol. 38, no. 2 (1996), pp. 35–38.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7년에 완성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유사개념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지침이 일본 단독 유사(즉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 한·미·일 협력방안)였다면 새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를 주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펼치는 중심무대가 한반도 및 대만해협 등 주변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향후 대만사태의 진전은 중·일관계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토(京都)대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교수는 “미·일동맹에서의 중국 변수”란 주제 발표(동아시아 연구 저널)를 통해 일본이 21세기의 새 경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그는 “1996년 미·일 신안보선언과 뒤이은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1993년 한반도 위기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급부상하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일본처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균형자·안정자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중관계는 계속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³²⁾

외교·안보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한 부시 행정부로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인 중국을 억제하는 데 미·일동맹은 필요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신방위대강의 구체적인 방위력

일본 정부가 1995년 11월 28일 확정된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병력과 장비의 대폭 삭감과 장비의 하이테크화와 무기의 합리적 운용 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이 양에서 질 지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방위정책³³⁾은 자위대 병력을 정원 18만 명에서 16만 명(예비역 1만 5천명, 상비정원

32) 『중앙일보』, 2001년 8월 9일. 동아시아 정치학자들은 동아시아 연구저널(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의 제3집 ‘중국과 동아시아’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2001년 8월 4일에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14만 5천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육상자위대는 12개 사단에서 8개 사단으로 줄어들었으나 헬기공수여단이 신설돼 전력손실을 보강했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정수를 60척에서 5척으로, 소해정 선단을 2개 부대에서 1개 부대로, P-3C 대잠함초계기를 100대에서 80대로 각각 감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비인 잠수함은 16척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P-3C의 레이더를 강화한다든지 영상 전송장치를 갖추는 등 잠수함의 추적뿐만 아니라 수상 감시능력도 증대시키기로 하였다.³⁴⁾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350대에서 300대로 줄이는 대신 공중조기경보기(AWACS) 4대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1995년 말 운용되고 있는 주력 전투기 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행기는 F-15이다. 이러한 세계 최강의 요격전투기 F-15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우디아라비아가 30대, 이스라엘이 21대 보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1995년 말에는 이를 185대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210대를 도입하였다.³⁵⁾ F-15의 도입은 이미 달성되기는 하였으나, 1996년부터의 5개년계획에서는 제조능력 유지와 소모분의 보충을 위해 F-15(정확히 말하면 F-15DJ)를 4대 새로 도입하고 1980년 초에 도입했던 초기 F-15의 성능보충을 위해 개량작업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공중급유기이다. 공중급유기의 도입은 5개년 계획으로 성능, 운용구상 등을 검토하여 결론을 내기로 하였다.

공중급유기는 과거에도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일본의 전투기와 전폭기의 행동반경·체공시간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키는 관계로, F-15의 전투행동반경이 1,500km(항속거리는 4,600km)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 번이라도 중간급유를 받으면 행동반경은 3,000km 이상으로 증가되어, 한반도 전체는 물론 중국 내륙까지 전투반경을 넓힐 수 있게 되어 일본주변지역에 대한 무력행사를 충분히 가능케 한다.³⁶⁾

이 당시 방위청측이 공중급유기의 후보기종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미국 공군이 1990년 초에 도입하기 시작한 C-17기종으로, 이 기종은 원래 장거리 대형수송기이다.

33) 『防衛白書 1996』, pp. 73-134.

34) 『朝日新聞』, 1995년 5월 24일.

35) 참고로 미국은 820대 보유.

36) F-15는 중국주력기 SU-27과 견주어지는 우수한 전투기이다. 『조선일보』, 2001년 8월 23일.

요컨대 신방위대강은 선진국의 군비억제경향을 고려한 외형적인 축소를 추구하였으나, 실제적으로 21세기의 군사강국을 위한 군사전진화 및 기동력강화를 내용으로 한 방위구상이었다.

2. 중기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방위력 정비에 대하여 1996년 이후에 관한 신방위대강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삼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³⁷⁾을 수행하였다.

이 계획의 방침에 의하면 기간부대와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신방위대강에서 정한 새로운 방위력 수준으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화·효율화·콤팩트화를 추진하였다. 미·일안보체제의 신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의 방공요격능력 부분에서는 장래의 기술적 동향에 대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요격전투기(F-15)를 앞으로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근대화를 위한 시개수(試改修)를 행하였다. 항공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초계 헬리콥터(SH-60J)를 도입하며, 장래의 기술적 수준의 동향에 대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날개 초계기(P-3C)를 앞으로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능력향상을 위한 개수를 하였다. 또한 고정날개 초계기(P-3C)의 후속 기종에 관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함정에 대해서는 호위함, 잠수함, 소해정, 미사일정 등을 건조하였다. 호위함의 건조에 대해서는 호위함 부대 전반의 효율적인 형태에 유의하면서 갱신·근대화를 추진하였다. 해상과 해안에서의 격파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원전투기(F-1)의 후속기종으로서 새로운 지원전투기(F-2)를 도입하며 계속해서 지대함 미사일(SSM-1)을 도입하였다.

수송력 및 기동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송 헬리콥터(CH-47), 수송함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 초계기(C-1)의 후속 기종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공중급유기의 성능, 운용구상 등 공중급유기능에 관하여도 검토해서 결론을 얻어

37) 『防衛白書 1996』, pp. 135-165.

대처하였다.

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방위관계비 총액의 한도를 1995년 가격으로 대략 25조 1,500억 엔으로 하는 것으로 1995년 12월 15일 각료회의에서 확정했다.³⁸⁾ 일본 정부는 1996년부터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방위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연평균 실질방위비 증가율은 2.1%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별도로 이 기간중 1,100억엔을 긴급재난대책비용 등에 사용키로 해 사실상 방위비 증가율은 2.2%에 이르렀다.

이 계획은 3년 후(1997)에 그 시점에서 국제정세, 경제·재정사정 등의 내외정세를 감안 하여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6월 23일 발표한 1998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동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입각한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이 질적으로는 군사력을 줄이고 있으나 양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술 운용능력 향상 및 군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³⁹⁾

3.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

2000년에 확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은 25조 1,600억 엔 규모이며, 5년 이내에 준항공모함급 호위함과 공중급유기 등의 공격형 장비를 도입, 방위력을 증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⁴⁰⁾

새로운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그 동안 전수방위 원칙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준항공급 초계용 헬기 탑재호위함 2천(배수량 3,500t, 1,900억 엔)과 공중 급유기 4대(900억 엔)의 도입이 명기됐다. 이와 함께 최신에 미사일 호위함인 이지스함 2척의 추가 도입(2,800억 엔), P3C 대잠수함 초계기 및 C1 수송기의 후계기 개발(3,400억 엔), 정보기술(IT)혁명에 대비한 소형 경량 전차 개발(500억 엔), 전투기 F5의 현대화(250억 엔) 등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의혹이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

38) 총예산중 무기 구입비는 4조 2800억 엔이다.

39) 『防衛白書 1998』, pp. 46-50, 61-71.

40) 『防衛白書 2001』, pp. 89-102.

적했다. 『방위백서 2001』은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 간에 이해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공군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해양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육군은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대만에 대한 직접 침공능력은 한정적이며 해·공군은 질적인 면에서 대만이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목표가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⁴¹⁾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2000년 방위백서보다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 방위백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기술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도 된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구와 고이즈미 총리의 자위권의 연구·검토 지시와 맞물린 결과였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긴축예산을 짜면서도 방위비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2002년의 긴축예산을 위해 분야별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면서 공공사업·개발원조(ODA) 등을 10% 삭감하기로 했으나 방위비에 대해서는 삭감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2001년 일본의 방위비는 4조 9,218엔이며 방위청이 당초 계획한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보다 0.3% 늘어난 4조 9,388억 엔이다.⁴²⁾

『방위백서 2002』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정체돼 있던 남북대화 재개(2002.4)에 합의했지만 군사적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신뢰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방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예산 총액을 명시하지 않아서 불투명하다면서 경계심을 나타내었다.⁴³⁾

『방위백서 2003』은 일본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피침을 상정한 기존의 안보전략과 자위대 장비, 편성의 수정방침을 최초로 공식 천명하였다. 또한 방위청과 자위대과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대량파괴무기,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MD 구축과 자위대의 통합안보역량 강화 및 국제공헌확대 의지 등을 강조하였다. 2003년도 방위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4조 9,265억 엔을 책정하였다.⁴⁴⁾

41) 위의 책, p. 60.

42) 『朝日新聞』, 2001년 8월 8일. 일본방위비가 국내총생산(GNP)에 차지하는 비중은 1% 조금 상회한다. 방위청은 인건비, 식량비 등 고정경비가 방위예산의 45%에 달한다고 하였다.

43) 『防衛白書 2002』, p. 60.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미사일개발 및 수출 등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위협요인임을 지적하였으며, 주한미군 전차가 훈련 중 일으킨 여중생 사망사고(2002.6) 등으로 인한 한·미 동맹관계의 악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⁴⁴⁾

일본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중거리 탄도탄 ‘노동’을 요격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미국으로부터 해상배치(이지스함탑재 SM-3), 지상배치(지대공유도탄 PAC-3) MD를 도입한다는 방침 하에 2004년 예산에 1,000억 엔 반영을 최종 결정하였다.⁴⁵⁾

일본정부·자민당이 당초 200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2년 앞당겨 작성하기로 한 데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등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북한·중국 위협론과 맞물린 것이다.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는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진다.⁴⁷⁾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이 활발해졌으며, 2003년 6월 6일에는 전쟁 상황에 대비한 유사법제를 마련하였다.⁴⁸⁾

최근 일본은 전쟁에 대한 유사7개 법안을 국회(참의원)에서 2004년 6월 14일 통과시켰다. 2003년 6월 6일 통과된 유사3개 법안에 이어 2004년 6월 14일 7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시를 대비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⁴⁹⁾

최근 미국은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伸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고 현지 사령관에 육군대장을 보임할 계획이라고 한다.⁵⁰⁾

44) 『防衛白書 2003』, p. 104.

45) 위의 책, p. 53.

46) 『朝日新聞』, 2003년 12월 19일.

47) 김영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추이』, 연구총서 02-03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83.

48)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일컫는다. 일본에서 유사법제의 의미는 자위대가 갖고 있는 군사력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49) 유사7개 법안은 전시에 미군이 원활히 활동하기 위한 미군 지원조치 법안, 자위대와 미군이 공항과 항만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미국과 일본이 물품과 역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 개정법안 등이다. 『朝日新聞』, 2004년 6월 15일.

50) 『産経新聞』, 2004년 4월 21일; 『日本新聞』, 2004년 4월 8일.

이는 한반도와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비, 주일 미군기지를 아시아의 핵심기지로 격상시키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 전체의 유사사태에 대응하는 임무를 가진 미1군단이 일본으로 이전되고, 그동안 소장 지급이 맡아온 주일 육군사령관에 이례적으로 대장이 보임된다면, 주일 미군기지의 성격을 일본 방위는 물론 동북아의 유사사태에 대비하는 수준에서 중동지역까지 시야에 둔 ‘중심(hub)기지’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 육군 1군단이 일본으로 이전된다면 이는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쳐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일미군 사령부에 해체·흡수되고,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산케이 신문은 분석했다.

2004년 7월 7일 홍콩의 명보(明報)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핵심으로 양보다 질 위주로 해·공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첨단 군사기술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므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는 또 “중국의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11.6% 늘어난 254억 달러”라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핵과 중국의 군사위협을 빌미로 미군의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⁵¹⁾하고 자위대의 군대변신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V.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중국은 유사법제가 자위대뿐 아니라 주일미군의 활동도 원활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일 동맹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기동성을 높이는 재배치 작업과 맞물린 유사법제 통과를 보는 중국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1) 고이즈미 총리는 2004년 초에 “내 임기동안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개헌안을 내기까지는 앞으로 5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4년 5월 3일.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동북아에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미사일방어(MD)망을 공동 연구·개발 중이고, 자위대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4대인 이지스함도 4대를 더 들여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14년 연속 국방비를 10%대로 늘렸고,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제 수호이-27 전투기의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고, 순항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을 만한 정치·외교적 지렛대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은 현안인 북한 핵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일본의 우경화에 빌미를 주지 않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인 군사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대만의 군비확충을 부르고 있다. 신형 프리깃함 도입과 전투기(경국호)의 독자 개발, 신형 지대공미사일 배치는 좋은 예다. 남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선군정치 기치 아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한국도 이지스함 등을 들여올 계획이다.

북한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크게 긴장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북핵문제로 인한 국민의 위기감과 미국이 대북압박을 지렛대로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일본의 재무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재무장할 경우, 가장 위협받는 국가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일본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할 가상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내에서도 일반적인 지적이다. 결국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등 일본 주변에서 전쟁에 돌입할 경우 자위대를 동원해 미국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북한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군국주의 부활’, ‘재침 책동 노골화’로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일본의 재무장을 구실로 핵무기 보유를 역으로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일본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사법제 통과를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와 직접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일본의 유사법제법안은 공격보다 방어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일본이 과거와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급변한 국제

질서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 자국 내의 정치·경제적 여건상 일본은 유사 법제에 이어 평화헌법 개정이후 자위대의 군대변신 수순을 밟을 것으로 한국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심각한 군비증강은 아·태지역국가들의 안보위협을 자극하여 본격적인 군비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아시아는 세계최대의 무기 구매시장으로 성장하였다.

VI. 정책대안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일본중시 안보전략은 한·미동맹의 상대적 이완 가능성, 일본의 대한반도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가능성, 주변 4국(미·일·중·러)의 갈등 현상을 촉진시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이 경색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의한 군사역할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자극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지역의 불안정 구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보통국가 일본의 등장으로 동북아에서 중·일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막기 힘든 대세임을 인정하되 일본이 보통국가를 넘어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의 세계 패권지위가 유지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안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고 또한 일본의 군사역할을 관리할 것이므로 한국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하여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미 동맹이 이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군사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을 주축으로 중국까지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재무장으로 인한 중·일간 긴장을 해소한다는 구상도 하여야 한다.⁵²⁾

52) 중국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안전보장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지역안보기구의 창설을 검토 중이라고

안보대화는 역내 정치·안보적 신뢰 구축과 유사 가능성 사전 예방을 위한 외교노력이며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공존에 기여하므로 한국은 역내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미·일 신가이드라인이 동북아지역에서의 양국간 군사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변유사의 주 대상이 한반도라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이해가 걸린 문제이므로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군에 대한 후방의 효율적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군사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본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 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변화한 것에 대해 한국은 이 전략 또한 한반도 전쟁 억제 기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일본의 다양한 형태의 군사개입에 대한 모든 상황을 사전 점검하여 작전 수용범위를 미·일과 협의하여 분명히 정해야 하며, 이를 주변국인 중·러에 통보하여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부족한 소해 능력 등 전투능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004년 2월 25일 보도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동북아 안보협상회의로' 로 불리는 이 구상은 북한의 미사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영토분쟁 등 역내 각국의 관심사를 협의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결국 미국과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